

2020. 03 제157호 (20-02)

경기도 여성안전 현황 및 향후과제

정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1.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안전이란 무엇인가?
2. 경기도 여성안전의 실태
3. 경기도 여성안전정책의 현황
4. 경기도 여성안전정책의 향후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슈분석」제157호(20-02)

발행인 정 정 옥

발행일 2020년 3월 6일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인 쇄 디자인펌킨 031)893-8316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음.

※「이슈분석」은 가족여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되며, 연구원 홈페이지(www.gfwri.or.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22)

요 약

○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안전이란 무엇인가?

-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안전이란 젠더폭력(gender violence)의 폐지를 촉진하고, 여성들이 경험하는 범죄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임. 또한 성평등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안전정책을 수립할 때 궁극적인 여성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경기도 여성안전의 실태

- 경기도의 지역안전지수는 4등급으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5등급에 비해 안전하나 경상도, 전라도 등에 비해 안전하지 않으며, 살인을 제외한 5대 강력범죄의 범죄 발생 장소로 노상(길거리) 비중이 높음.
- 경기도는 성폭력을 제외하고 가정폭력, 성매매,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 데이트폭력까지 모든 유형의 젠더폭력에서 전국보다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3년간은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와 데이트폭력 증가추세가 두드러짐.
- 경기도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을 살펴보면, 경기도 여성의 15.0%만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위험해짐에 대한 의견이 여성 35.5%로 남성(26.4%)에 비해 높음.

○ 경기도 여성안전정책의 현황

- 경기도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피해 예방대책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성안전의 피해자화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으로 여성안전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경기도 여성안전정책의 향후 과제

-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성인지적관점에 근거한 여성안전정책, 도내 여성안전정책 수요파악 및 환류를 위한 제도 정비, 도민의 불안감 감소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환경(길거리, 유해환경,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개선정책, 새로운 젠더폭력 유형(온라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기초한 사업 발굴, 지역(공동체)집약적 여성안전사업 확산 등이 필요함.

목 차

1.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안전이란 무엇인가	1
가. 안전이란 무엇이며, 여성의 안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	1
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안전이란 무엇인가?	2
2. 경기도 여성안전의 실태	3
가. 범죄와 여성안전	3
나. 젠더폭력범죄와 여성안전	5
다. 불안과 여성안전	11
3. 경기도 여성안전정책의 현황	12
4. 경기도 여성안전정책의 향후 과제	14
가. 성인지적관점에 근거한 여성안전정책의 수립 필요	14
나. 도내 여성안전정책 수요파악 및 환류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15
다. 도민의 불안감 감소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정책 필요	15
라. 새로운 젠더폭력 유형에 기초한 사업 발굴 필요	16
마. 지역(공동체)집약적 여성안전사업 확산 필요	16

1.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안전이란 무엇인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gender violence)의 폐지를 촉진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위한 평등한 기회(취업과 교육, 정치적 참여, 자원, 여가 등에 대한 평등한 접근)를 구성해야 실현이 가능해”

가. 안전이란 무엇이며, 여성의 안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¹⁾

- 안전(safety or security)은 개인적 안전에서부터 사회적 안전(국가안보)까지 그 범위가 매우 폭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개념정의는 그 주체와 상황,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 때문에 안전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국어사전에서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고, 옥스퍼드(Oxford)사전의 정의 또한 위험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된 상태, 신체적 손상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protected from any danger or harm, not likely to lead to any physical harm of danger)라고 정의하고 있음.
- UN은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안전은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권리이며 필수조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1994), WHO(1998)에서는 안전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여러 요소들 간에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균형(dynamic balance)의 결과이며, 역동적 균형은 인간이 주변 환경과-물리적 환경 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조직적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폭력과 위험, 손상이 없는 상태로 축소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이재식, 1997; 임현진 외, 1997; 서울특별시, 2005; 소방방재청, 2007). 안전은 폭력이나 손상(injuries)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상황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과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안전함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임(이재식, 1997; WHO, 1998; 소방방재청, 2007). 심리학에서 또한 본질적으로 안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없으며 안전은 개인의 태도와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의존한다고 봄.

1) 안전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정혜원·안태윤(2015) 경기도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췌함.

- 안전도시에서는 안전(Safety)을 ‘다양한 중재를 통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적절하게 조절되는 상태’로서, 단순히 손상이나 위험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동적인 개념으로 봄. 그리고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손상예방전략 또는 프로그램들은 손상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안전을 안전한 상태, 즉 얼마나 안전하냐 보다는 안전 부재에 따른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규정해왔다고 봄. 이에 따라 객관적·주관적 차원의 안전에 대한 조화된 접근을 통하여 안전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개념을 안전증진(Safety Promotion)으로 정의함.
-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의아래서 ‘여성안전’은 성폭력범죄 등과 관련된 안전으로 축소되어 진행되었고, 여성안전정책은 지방정부에 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정책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 실행해왔음.²⁾ 여성안전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흉포화되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일상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범죄피해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접근보다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음. 여성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심귀가서비스, 안심벨 등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대책과 여성친화도시사업 중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사업 등이 있음.

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안전이란 무엇인가?

- 여성과 소녀가 안전한 지역사회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젠더폭력)의 폐지를 촉진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위한 평등한 기회(취업과 교육, 정치적 참여, 자원, 여가 등에 대한 평등한 접근)를 촉진시키는 것임³⁾.
- 성인지적 여성안전이란 젠더폭력의 폐지를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경험하는 범죄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안전정책을 수립할 때 궁극적인 여성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이에 이 글에서는 여성안전을 ‘범죄’ 분야로 한정하여 정의하되, 범죄와 젠더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을 포괄하여 개념화하고자 함. 여성의 범죄불안감은 성폭력 등 젠더폭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젠더폭력

2) 강희영(2017)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중장기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 Malanie Lambrick & Liliana Rainero, Safe Cities, 2010. UN Women 의 The Virtual Knowledge Centr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홈페이지 <http://endvawnow.org/en/articles> 에서 검색, 부분 발췌함. 정혜원·안태윤(2015) 경기도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재인용.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책을 구성해야 하며, 성별에 기반한 폭력(젠더폭력)이 감소될 때 궁극적인 범죄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고 여성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음⁴⁾. 뿐만 아니라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흉포화되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일상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범죄피해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접근보다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을 중심으로 개념화할 때 여성안전이 실현될 수 있음.

2. 경기도 여성안전의 실태

- 경기도 여성안전 실태는 단순히 범죄가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동적인 개념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 감소까지 포괄하여 개념화해야 함. 이에 경기도 여성안전 실태를 1) 범죄와 여성안전 2) 젠더폭력과 여성안전 3) 불안과 여성안전으로 세분화하여 탐색하고자 함. 특히, 여성들의 범죄불안감은 성폭력 등 젠더폭력의 불안감이 기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발생자체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임.

가. 범죄와 여성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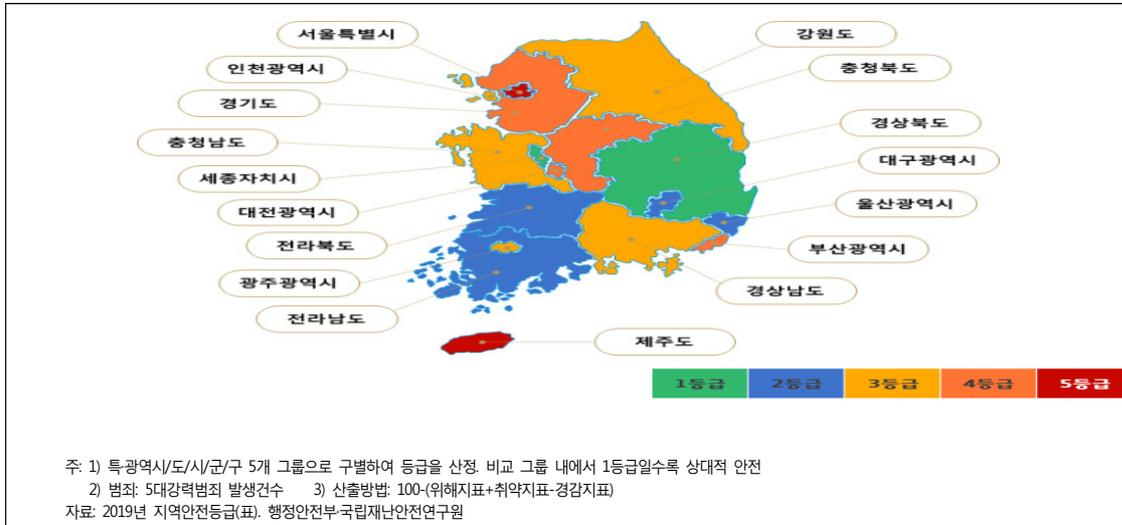
“경기도의 지역안전지수는 4등급으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5등급에 비해 안전하나 경상도, 전라도 등에 비해 안전하지 않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발생 장소로 노상 비중이 높아”

- 경기도 여성안전 실태는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건수를 계량화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와 경찰청의 5대 강력범죄 발생 추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매년 12월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2019년 경기도 지역안전등급(범죄)은 4등급으로

4) 장안식 외 (2011)에서는 성별차이도 중요하지만 여성내부의 연령교차성에 따라 두려움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의 경우에는 여성의 두려움이 연령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남성의 두려움수준으로 평준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에서 성범죄의 직간접적 피해경험 및 인식은 중요한 핵심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5등급보다는 낮으나 다른 광역자치단체 비해 범죄 위험이 큰 지역임.

<그림 1> 2019년 전국 지역안전등급(범죄)



○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안전등급(범죄)을 살펴보면, 5등급 지역은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구리시이며, 4등급 지역은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동두천시,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포천시이며 3등급 지역은 고양시, 군포시, 파주시, 안성시, 여주시이고 2등급 지역은 과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이며 1등급 지역은 의왕시, 용인시로 나타남.

<그림 2> 경기도 지역안전등급(범죄)



- 경찰청자료를 근거로 지난 5년간 경기도의 5대 범죄의 발생 현황을 경기도의 발생비율(인구 1만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경기남부의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살인과 강도, 절도는 감소추세이고 폭력은 증가추세이며 강간 및 강제추행은 2014년 3.7에서 2015년 4.0으로 증가한 후에 2016년 4.1, 2017년 4.2, 2018년 4.0으로 소폭 감소함. 경기북부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살인, 강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절도 및 폭력은 감소하였고 강간 및 강제추행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정혜원 외, 2019)⁵⁾.
- 2018년 경기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먼저 살인의 발생장소로는 아파트, 연립주택이 가장 많고, 강도, 절도, 폭력,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장소는 모두 노상(길거리)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음. 특히,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발생장소는 다른 범죄에 비해 노상(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고, 숙박업소 및 목욕탕, 유흥업소 등 발생비중이 높은 것도 주목해봐야 할 것임.
- 더불어 최근 원룸이나 소규모 주택 등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여성 1인가구는 전국 및 서울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음. 때문에 서울 등과 같은 20대 여성 1인 가구 중심의 안전전략보다는 경기도 특성에 기반한 1인 가구 밀집지역 특성에 따른 안전 전략이 요구됨.

나. 젠더폭력범죄와 여성안전

“경기도는 성폭력을 제외하고 가정폭력, 성매매,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 데이트폭력까지 모든 유형의 젠더폭력에서 전국보다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3년간은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와 데이트폭력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 여성의 범죄 불안감은 성폭력 등 젠더폭력의 불안감이 기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발생자체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임. 이에 여성안전정책에 있어 개별 범죄양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젠더폭력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화하는 것임. 이에 이 글에서는 여성안전 실태를 젠더폭력범죄 유형별로 탐색해보고자 함.

5) 정혜원·강지현(2019) 경기도 젠더폭력방지 기본계획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 경기도 젠더폭력유형별 검거비율 증감추이

- 2018년 경기도 젠더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을 제외하고 가정폭력, 성매매,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 데이트폭력까지 모두 전국에 비해 높은 검거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 1> 2018년 전국·경기도 젠더폭력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전국		경기남부		경기북부	
	건수	만분율	건수	만분율	건수	만분율
성폭력	30,045	5.8	5,080	5.2	1,582	4.7
가정폭력	41,905	8.1	9,964	10.3	2,923	8.6
성매매	6,856	1.3	1,597	1.7	349	1.0
불법촬영·유포	8,144	1.6	1,838	1.9	396	1.2
데이트폭력(명)	18,671	3.6	6,063	6.3	761	2.2

주: 만분율: 인구 1만명당 수 (수/주민등록인구 × 10,000)
 자료: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공개자료(2019.6.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각 연도 말 기준)

- 지난 3년간(2016-2018년) 경기남부지역 젠더폭력 검거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성폭력,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와 데이트폭력 등과 같은 젠더폭력유형이 증가하였고, 특히 데이트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짐.

<표 2> 경기남부지역 젠더폭력 검거 증감 추이(2016-2018년)

(단위: 건, 명, %)

구분	2016년		2018년		2016-2018년 대비
	건수	만분율	건수	만분율	
성폭력	5,007	5.3	5,080	5.2	0.1↓(73건↑)
가정폭력	10,868	11.6	9,964	10.3	1.3↓(904건↓)
성매매	2,425	2.6	1,597	1.7	0.9↓(828건↓)
불법촬영·유포	1,712	1.8	1,838	1.9	0.1↑(126건↑)
데이트폭력(명)	1,575	1.7	6,063	6.3	4.6↑(4,488건↑)

주: 만분율: 인구 1만명당 수 (수/주민등록인구 × 10,000)
 자료: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공개자료(2019.6.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각 연도 말 기준)

- 지난 3년간(2016-2018년) 경기북부지역 젠더폭력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남부지역과 유사하게 성폭력,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이 증가하였고, 특히 남부에 비해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표 3> 경기북부지역 젠더폭력 검거 증감 추이(2016-2018년)

(단위: 건, 명, %)

구분	2016년		2018년		2016-2018년 대비
	빈도	만분율	빈도	만분율	
성폭력	1,547	4.6	1,582	4.7	0.1 ↑ (35건 ↑)
가정폭력	3,670	11.0	2,923	8.6	2.4 ↓ (747건 ↓)
성매매	508	1.5	349	1.0	0.5 ↓ (159건 ↓)
불법촬영유포	259	0.7	396	1.2	0.5 ↑ (137건 ↑)
데이트폭력(명)	461	1.4	761	2.2	0.8 ↑ (300건 ↑)

주: 만분율: 인구 1만명당 수 (수/주민등록인구 × 10,000)

자료: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공개자료(2019.6.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각 연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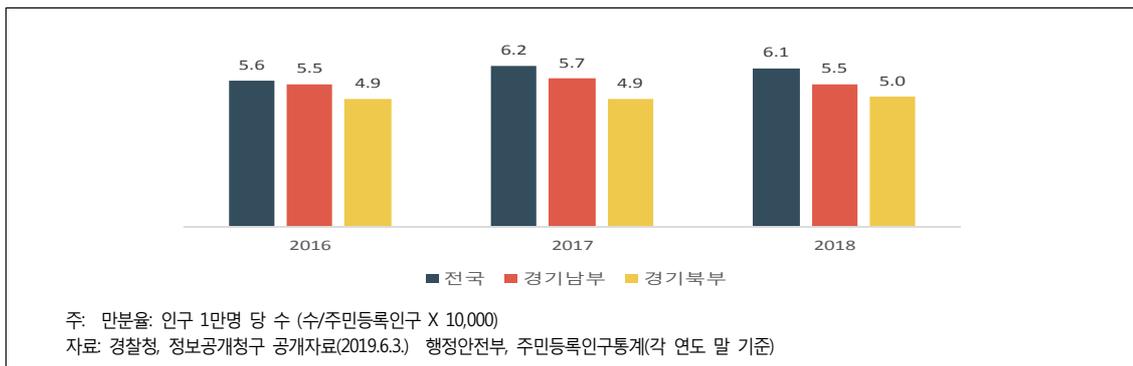
2) 젠더폭력 유형별 특징 및 현황

가) 성폭력 : 지난 3년간 전국과 경기도 모두 증가추세, 13세미만 성폭력피해아동도 증가

- 지난 3년간(2016~2018) 성폭력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인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발생비율이 5.6(2016) → 6.2(2017) → 6.1(2018)로 증가했다면, 경기남부는 5.5(2016) → 5.7(2017)로 증가했다가 5.5(2018)로 소폭 하락하였음. 경기북부는 4.9(2016) → 4.9(2017) → 5.0(201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 지난 3년간(2016~2018) 성폭력 발생비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3> 성폭력 발생 현황(2016-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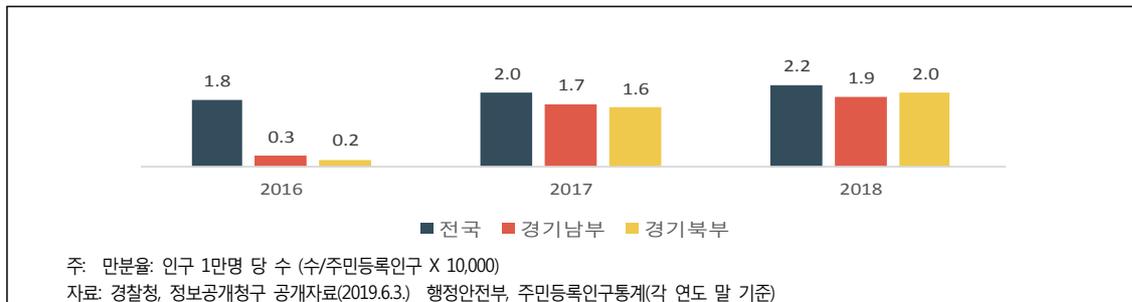
- 성폭력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타인이 성폭력가해자인 경우가 50.3%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가 29.1%로 뒤를 이었으며 지인, 애인 등의 순서였음. 지난 3년간(2016~2018) 이런 전체적인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국 및 경기도 모두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타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지난 5년간(2014~2018)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수와 13세 미만 아동 1만 명당 발생건수 인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발생비율이 1.8(2016) → 2.0(2017) → 2.2(2018)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기남부는 0.3(2016) → 1.7(2017) → 1.9(2018)로 증가함. 경기북부도 0.2(2016) → 1.6(2017) → 2.0(2018)으로 증가추세임.

<그림 5>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발생 비율(2016-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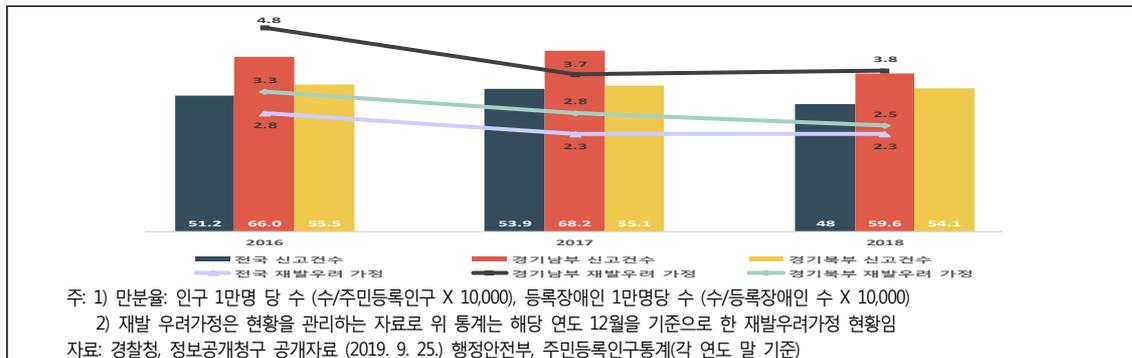


나) 가정폭력 : 경기도는 전국보다 가정폭력범죄 수치 높고,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지속적 증가추세

- 지난 3년간(2016~2018) 경기도의 가정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와는 다르게 신고비율, 검거비율, 동종 재범 인원, 재발우려가정 비율 등 모든 수치에서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향후 경기도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재범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6> 가정폭력 신고건수 · 재발 우려가정 비율(2016-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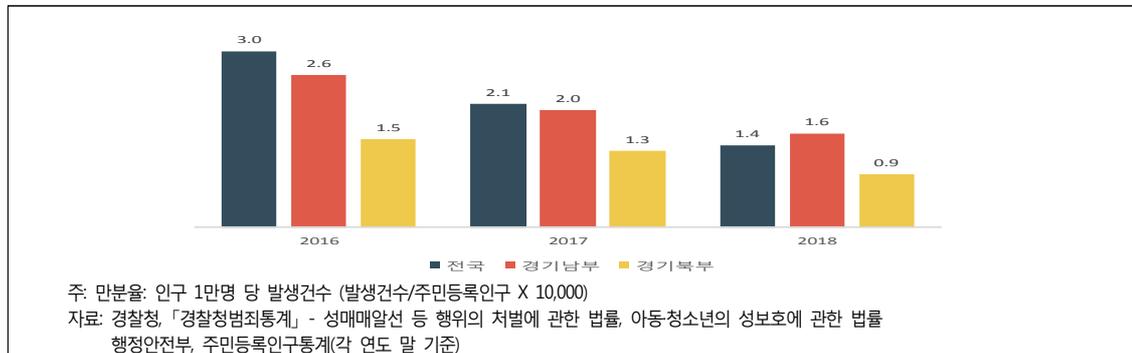
- 경기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 현황(2016-2018)을 살펴보면, 2016년 경기남부의 다문화가정의 검거 건수는 381건(전국대비 39.0%), 2017년에는 417건(전국대비49.7%), 2018년에는 666건(전국대비 52.3%)로 나타남. 지난 3년간(2016-2018) 경기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 성매매 : 전국과 경기도 모두 감소추세

- 지난 3년간(2016-2018) 성매매 발생건수 및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인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발생비율이 3.0(2016)→ 2.1(2017)→1.4(2018)로 감소추세임. 경기남부의 경우에는 성매매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2.6(2016)→ 2.0(2017)→ 1.6(2018)로 감소하였고, 경기북부도 1.5(2016) → 1.3(2017)→ 0.9(2018)으로 감소추세임.

<그림 7> 성매매 발생건수 비율(2016-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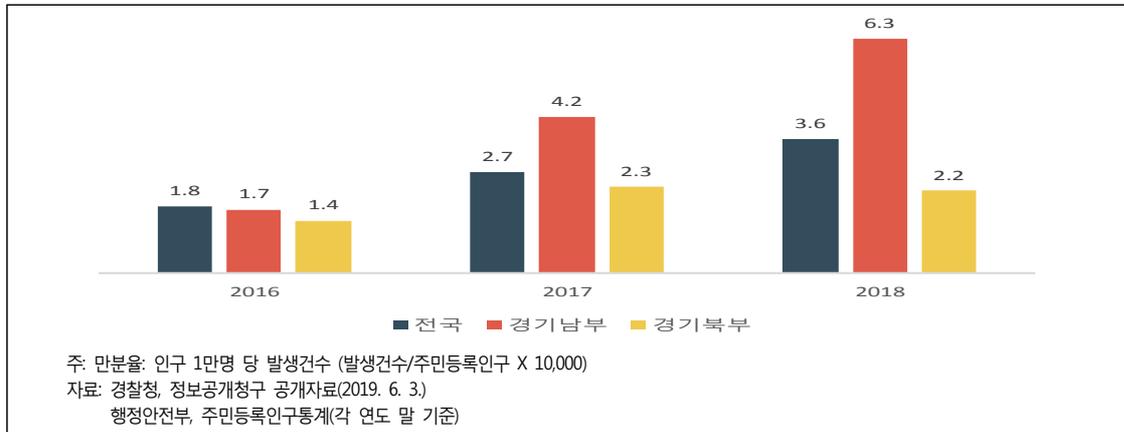
라) 데이트 폭력 : 전국과 비교하여 급격한 증가세, 20대 가해자 증가세

- 지난 3년간(2016-2018) 데이트폭력 신고건수와 인구 1만 명당 신고건수 인 신고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신고비율이 1.8(2016) → 2.7(2017) → 3.6(2018) 로 증가추세이고, 경기남부의 경우에는 데이트폭력 신고비율은 1.7(2016) → 4.2(2017) → 6.3(2018)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경기북부의 경우에는 1.4(2016) → 2.3(2017) → 2.2(2018)로 나타남. 경기남부의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 지난 2년간(2017-2018) 데이트폭력 신고비율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경기남부의 2016년 신고건수는 전국대비 16.8%이고 2017년은 28.2%, 2018년은

37.5%로 전국대비 신고건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데이트 폭력 발생 신고 비율(2016-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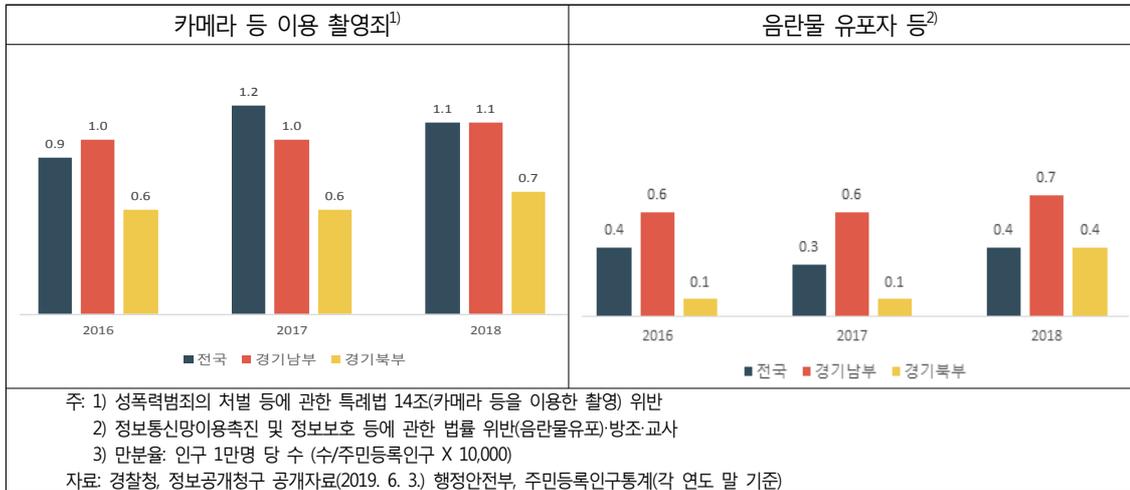
- 경기남부 2018년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대 3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26.9%, 40대 18.8%, 50대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북부도 20대 34.1%, 30대 2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가 전국과 구별되는 특성으로는 20대 가해자의 증가폭이 큼.

마) 온라인 성폭력 : 미세한 증가세

- 불법촬영 유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과 음란물 유포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한 음란물유포·방조 등과 관련된 범죄)의 인구 1만명 당 검거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모두 지난 3년 동안(2016-2018) 미세하게 증가함. 특히, 2018년 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한 음란물유포·방조 등과 관련된 범죄의 경기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약 32.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9> 불법촬영 유포 및 음란물 유포 등 단속 현황(2016-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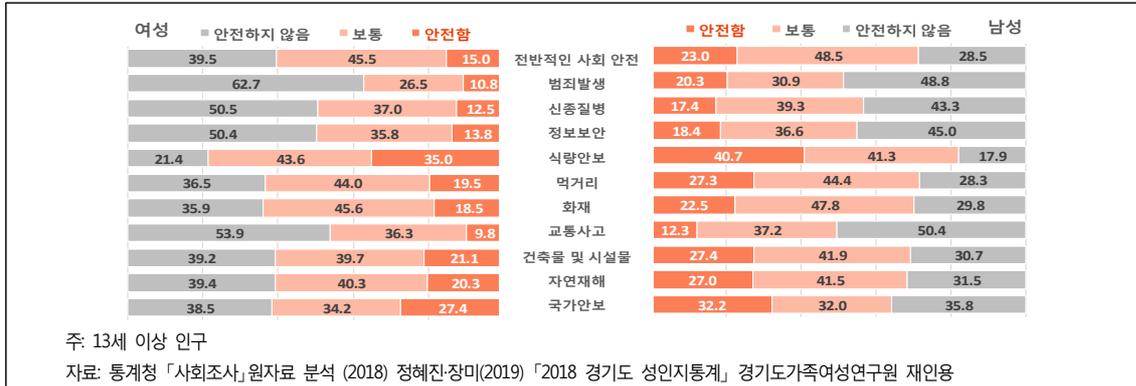
다. 불안과 여성안전

“전반적인 사회안전과 관련해서 경기도 여성의 15.0%만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위험해짐에 대한 의견이 여성(35.5%)이 남성(26.4%)보다 높아”

-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는 범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적 안전 수준을 높일 수도 있음(강은영 외, 2017). 이에 단순히 실제 범죄 발생 위험의 감소가 아닌 주관적인 감정인 불안을 포함한 안전/안심의 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여성들의 범죄불안감은 성폭력 등 젠더폭력의 불안감이 기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발생자체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일 수 있고, 젠더폭력정책에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역사회 젠더폭력전략일 수 있음(강은영 외, 2017).
- 이에 경기도 여성의 안전 의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 여성은 15.0%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23.0%)에 비해 8%p 낮음. 범죄분야의 경우에는 여성은 10.8%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남성(20.3%)에 비해 9.5%p 낮음.

<그림 10> 사회 각 분야 안전에 대한 인식(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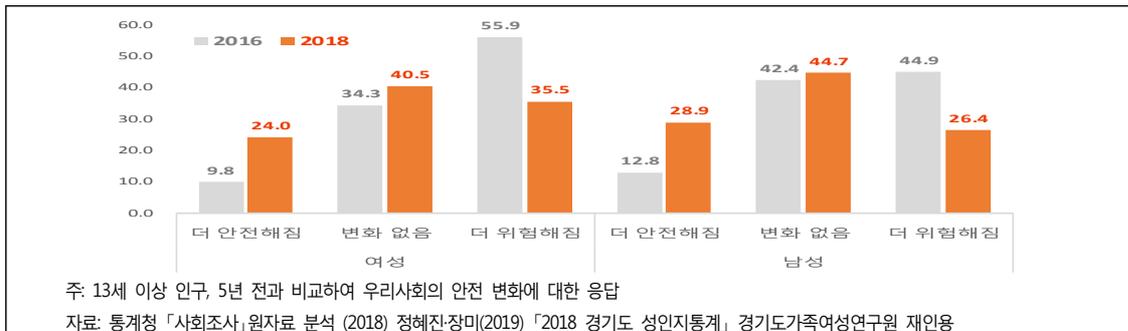
(단위 : %)



○ 사회 안전상태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위험해짐에 대한 의견은 여성이 35.5%, 남성이 26.4%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상태 변화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정혜진·장미, 2019)⁶⁾.

<그림 11> 성별 사회 안전상태 변화에 대한 인식(2016,2018)

(단위 : %)



3. 경기도 여성안전정책의 현황

“경기도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피해 예방대책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내 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성안전의 피해자화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으로 여성안전정책을 진행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

6) 정혜진·장미(2019), 2018 경기도 성인지통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경기도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은 2018년 도의회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함. 경기도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위한 폭력피해 예방 대책 강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 홈방범 서비스 지원, 불법 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반 운영, 도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가정·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하고 있음.

<표 4> 2019년 경기도 여성안전 및 여성폭력 관련 정책

구분	내용
안전한 환경을 위한 폭력피해 예방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취약 계층 홈방범 서비스 지속 지원 -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반 운영 -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운영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해마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가정·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출처: 경기도 여성가족국 업무추진계획 자료

- 경기도 여성안전정책은 경기도 자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젠더 폭력정책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에 경기도 특성에 맞는 능동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및 조직 규모 등을 살펴보면 미흡한 지점이 많으며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음.
- 세부적으로 경기도 여성안전정책을 살펴보면, CCTV 설치, 우범지대 개선 등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범죄피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각종서비스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여성안전, 여성안심 등으로 지칭되는 하드웨어적 여성안전정책들은 여성폭력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성을 ‘보호’ 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소극적인 정책으로 여성을 ‘약자화’, ‘피해자화’ 하고 있다는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황정임 외, 2018)⁷⁾. 즉, 여성을 예비 ‘피해자화’ 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담론 생산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있음(한국여성의 전화, 2014; 황정임 외, 2019 재인용). 예를 들어, 여성은 안심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혼자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약자인가하는 반론 등

7) 황정임·마경희·이동선·이선민·정윤미·김희(2018), 2018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제기되고 있음.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서 여성에게 제공되는 정책서비스는 여성들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함. 대다수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집에 돌아갈 때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임.

4. 경기도 여성안전정책의 향후 과제⁸⁾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성인지적관점에 근거한 여성안전정책, 도내 여성안전정책 수요파악 및 환류를 위한 제도 정비, 도민의 불안감 감소를 위한 여성안전정책, 젠더폭력 유형별 특성에 기초한 지역 사업 발굴, 지역(공동체)집약적 여성안전사업 확산 등이 필요함”

가. 성인지적관점에 근거한 여성안전정책의 수립 필요

- 여성안전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폐지를 촉진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것임. 여성은 낮은 피해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안전감이 낮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심리적·행동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감수해야 함. 이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의 여성안전사업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성안전정책은 왜곡되게 실행될 경우 여성의 피해자화 혹은 약자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요구됨. 2018년 이후 한국 사회를 요동치게 한 성폭력(성희롱)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동시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일깨웠음(정혜원 외, 2019).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양성평등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구성원들이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평

8) 여기서 제안된 사업들 가운데 일부는 정혜원 외(2019), 경기도 젠더폭력방지 기본계획 수립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췌함.

등한 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권리와 의무를 가짐. 시민으로서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갖게 될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

나. 도내 여성안전정책 수요파악 및 환류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현재 경기도에는 여성안전정책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가 미흡함. 젠더폭력범죄의 수준은 공식통계(범죄통계)와 피해자조사 등 실태조사로 파악할 수 있으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공식공계(범죄통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조사는 부재함. 경기도 여성안전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함.
- 더불어 도내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제도 역시 미흡함. ‘도민제안 젠더폭력방지정책 의제 발굴 100인 원탁회의’ 등과 같은 사업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함.

다. 도민의 불안감 감소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정책 필요

- 경기도 여성안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지역사회 환경(길거리, 유해환경, 1인가구 밀집 지역 등 환경 개선) 개선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친화적 환경설계 및 점검, 지역별 주거환경/일상생활 안전 및 위험요소 해소, 빅데이터 및 ICT 활용을 통한 젠더폭력 근절, 시군주도형 지역사회 안전 개선사업 발굴 및 지원, 안전한 지역공동체 조성활동의 성인지성 제고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⁹⁾.
 - 특히 ‘범죄예방무장애여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형 통합 가이드라인’, ‘위험장소 관리 사업’, ‘젠더폭력 안전체계 U-통합 플랫폼’, ‘빅데이터 활용 STOP 길거리 성희롱 지도’, ‘드론 등 ICT 기술 활용 범죄예방설계’, ‘1인 가구 밀집지역 대상 경기도형 안전 이음사업’, ‘1인 근무자 안전 개선사업’ 등이 필요함.

9) 자세한 내용은 정혜원·강지현(2019) 경기도 젠더폭력방지정책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참조

라.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에 기초한 사업 발굴 필요

-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근거한 젠더폭력 유형별 사업 발굴이 필요함. 경기도는 성폭력을 제외하고 가정폭력, 성매매,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 데이트폭력까지 모든 유형의 젠더폭력에서 전국보다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하며, 지난 3년간은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와 데이트폭력 증가추세가 두드러짐. 이에 불법촬영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온라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구축,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및 온라인 성범죄 근절 및 인식개선 사업, 불법촬영 상시 점검 및 불법촬영장비 탐지기기 무료대여,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와 같은 사업이 필요함.
- 더불어 전통적으로 경기도는 전국보다 가정폭력범죄관련 수치도 높고,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고려할 때, 경기도차원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재발우려가정 협업 모니터링 및 위기가정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가해자 통합적 지립지원 사업 개발, 폭력피해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설치 등이 필요함.

마. 지역(공동체)집약적 여성안전사업 확산 필요 :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안심마을 인증제

- 최근 흉대 불법촬영·등촌동 전처 살인, 신림동 여성 1인 가구 범죄 등과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여성안전과 관련된 불안감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여성과 여아가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폭력에 대한 불안은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불안을 세부화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임. 이에 여성안전과 관련된 불안 감소를 위해서는 집약적인 형태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접근할 때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 집약적인 형태의 정책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분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성안전정책을 생활권(공동체)의 특성에 근거하여 집약시킬 필요가 있음¹⁰⁾.

- 이에 생활권(위험밀집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성인지적 제2세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로의 변형이 필요함. 2세대 셉테드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육, 문화, 사회프로그램 등을 접목하여 1세대 셉테드의 하드웨어적 접근과 2세대 셉테드의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합하는 것임. 경기도에서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위험요인에 대한 접근을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변화시켜야 하고, 방법과 동네 환경개선과 더불어 자연적 감시 환경을 구성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근거한 다원화되고, 분권화의 자치 공간으로서의 경기도형 셉테드사업을 구성해야 하며 불안의 유형별로 맞춤형 사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의 여성안전사업 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 근거한 ‘경기도형 여성안심마을 인증제’도입을 제안함.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마을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마을(공동체)환경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안심사업 발굴을 통해,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안전사업의 형식을 변화할 수 있을 것임.

10) 예를 들어 1인 가구 밀집지역이라면, 1인 가구 밀집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정책을 집약시켜야 할 것임.